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NNOPOLI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NNOPOLI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SPIN-OFF COMPANY

www.innoplis.or.kr



대한민국의
미래를 혁신합니다
—
가이드북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NNOPOLI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발행일 2020년 12월 28일
발행인 강병삼 이사장
발행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SPIN-OFF COMPANY

www.innoplis.or.kr



대한민국의
미래를 혁신합니다

—

가이드북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NNOPOLI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Contents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일러두기

이 책은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인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CEO,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연구소기업의 개요와 설립운영 절차, 관련 법규, 각종 지원책 등 연구소기업의 A to Z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06 연구개발특구 소개

10 연구개발특구 및 연구소기업 관련 주요통계

12 연구소기업이란?

14 제1장 연구소기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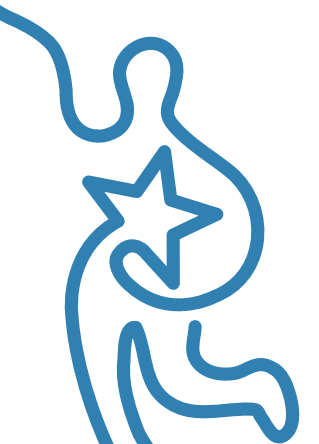
| 제1절 | 연구소기업의 이해
| 제2절 |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기대효과

30 제2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지원

| 제1절 |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 제2절 | 연구소기업 설립·운영 관련 규정
| 제3절 |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 제4절 | 연구소기업 지원 사업

62 부록

[Q&A 톡] 연구소기업 만들기
연구소기업 관련 법규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약정서 작성 가이드
표준투자회수 절차 가이드라인
기술출자 VS 기술라이센스 비교



Making The Future

과학기술의 희망! 성공 비즈니스의 시작!

연구개발특구,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과학기술의 오늘을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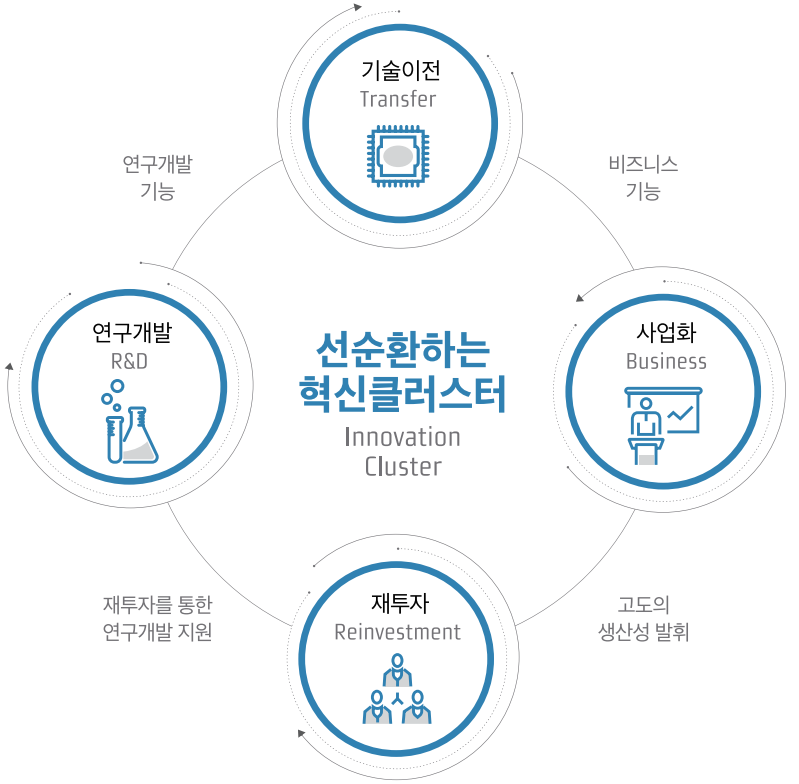
연구개발특구는 「지식창출–기술확산–창업」 생태계가 약동하는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지입니다.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5개 특구와 12개의 강소특구가 하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끕니다.



안산 강소특구 특화 분야 ICT 융복합 부품소재 지정 2019.08 총면적 1.73㎢	청주 강소특구 특화 분야 스마트IT부품 · 시스템 지정 2019.08 총면적 2.20㎢	진주 강소특구 특화 분야 항공우주부품 · 소재 지정 2019.08 총면적 2.17㎢
포항 강소특구 특화 분야 첨단신소재 2019.08 총면적 2.72㎢	창원 강소특구 특화 분야 지능전기기반기계융합 지정 2019.08 총면적 0.65㎢	김해 강소특구 특화 분야 의생명 · 의료기기 지정 2019.08 총면적 1.13㎢
흥릉 강소특구 특화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지정 2020.08 총면적 1.36㎢	천안 · 아산 강소특구 특화 분야 차세대 자동차 부품 2020.08 총면적 1.32㎢	군산 강소특구 특화 분야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지정 2020.08 총면적 2.70㎢
구미 강소특구 특화 분야 스마트 제조 시스템 지정 2020.08 총면적 2.57㎢	울주 강소특구 특화 분야 미래형 전지 지정 2020.08 총면적 3.01㎢	나주 강소특구 특화 분야 지능형 태양광 에너지저장 2020.08 총면적 1.69㎢

「R&D–기술사업화–재투자」가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



국가과학기술 혁신 +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로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며
국가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집중 육성합니다.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기관개요

설립목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설립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00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구지원본부 설립 및 특구육성사업 본격 추진
제 1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고시(2006–2010)

2011 제 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고시(2011–2015)
광주, 대구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20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범
부산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2015 전북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2016 제 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고시(2016~2020)

2019 6개 강소특구 지정(김해, 진주, 창원, 포항, 안산, 청주)

2020 6개 강소특구 추가 지정(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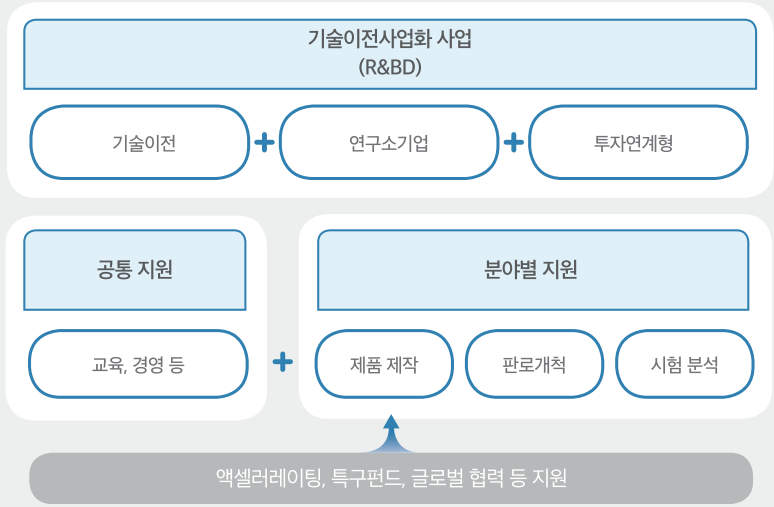
주요사업



기술 / 수요기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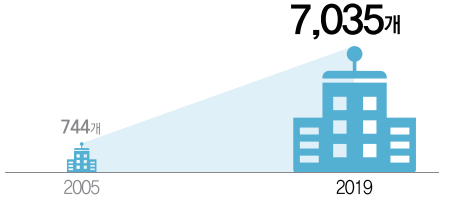
성장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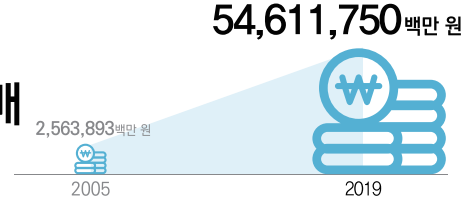
연구개발특구 및 연구소기업 관련 주요통계

··· 연구개발특구,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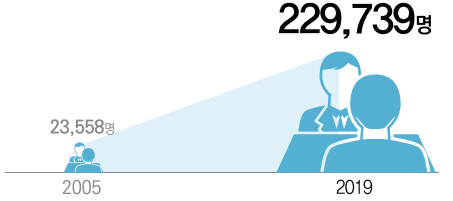
입주기관 9.5배



매출액 21.3배



고용현황 9.6배



1. 우리나라의 연구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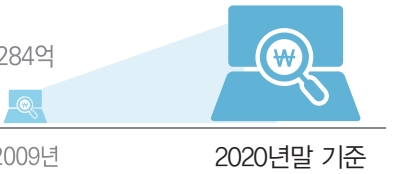


2. 연구소기업 투자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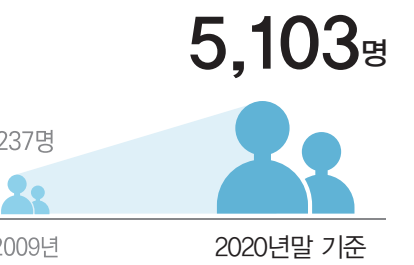
한국원자력이 출자한 제1호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는 약 9631억 원의 주식가치(21.12기준) 최초 자본입금 대비 963배로 성장했다.



3. 연구소기업 총 매출액



4. 연구소기업 고용률



연구소기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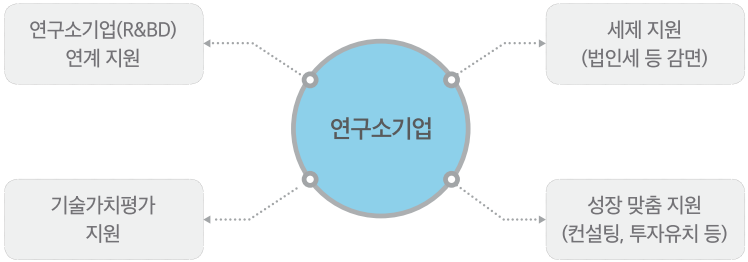
정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

설립요건

- 공공연구기관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규모에 따라 **자본금의 10~20% 이상 출자**할 것
- **공공연구기관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할 것
-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할 것

지원내용





기업 CEO

준비된 기술로 여는 **신성장 동력**

01 기업 CEO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 "신사업 동력 발굴"
(출처 : 기업 CEO 및 임원 대상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고민거리 조사(전경련, 2016))

02 연구소기업은
투자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준비된 기술"
"기업"의 경영자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력
"정부기관"의 물적, 제도적 지원이
모여서 설립

03 그러므로 성공적인 신사업
발굴의 보증수표인
연구소기업에 주목하세요

공공연구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 등에서 연간 연구개발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보조받는 법인, 과학기술 관련 공익법인 등의 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둔 공공기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등(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공공 연구기관

기술공급자에서 **더 적극적인 주주로**

01 기술공급자를 넘어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싶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연구자의 고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자체 재원이 필요한
"공공연구기관의 고민"

기술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 고민"

02 연구소기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사업화 성공률도 높이고,** 출자한 기술자산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으로 연구환경 개선**도
가능합니다.

03 **모두에게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는 연구소기업에 주목하세요**

제 1 장



연구소기업 설립 가이드북

연구소기업의 개요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등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되는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성과(공공기술)의 기술사업화 경로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화 활동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의 해당 연구소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절 연구소기업의 이해

1.1 도입 배경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시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의
해당 연구소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세부적인 설립·운영 방법에 앞서
먼저 **이 제도의 탄생 배경**부터 알아보자.

연구소기업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01 첫째, [다양한 공공기술 사업화 방안]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사업화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많은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 자주 거론된 것이 '기술라이센스 중심의 획일적인 기술사업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기존 기술라이센스 및 연구원 창업 방식 이외에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기업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연구소기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02 둘째, [공공연구기관 역할의 변화]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확산되며 공공연구기관 역시 **적극적인 역할 변화가 필요**해졌다. 전통적인 지식 창출 · 공급자 역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술자산을 활용한 벤처생태계 활성화로 정체기에 접어든 국가산업구조 혁신의 새로운 수혈처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벤처 버블 논란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의 창업이 급감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연구소기업을 설립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급격히 부상했다.

> 교수 · 연구원 창업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04년 전체 벤처기업의 39.5%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 되었다.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위축된 교수 · 연구원 창업활동은 2011년 8.55%까지 감소하였다. (STEPI, 2012)

03 셋째, [공공과 민간의 시너지효과 창출]

공공과 민간 영역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다. **공공연구기관은 연구 개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경영자원과 경험**이 강점이다. 이 같은 **서로의 '보완자산'을 하나로 합하면 기술사업화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데 산 · 학 · 연 그리고 정부 모두의 판단이 일치했다. 이는 연구소기업이 단순 기술 이전 방식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1.2 해외 사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사업화에 주력하는 것은 해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와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G2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들은 특히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장려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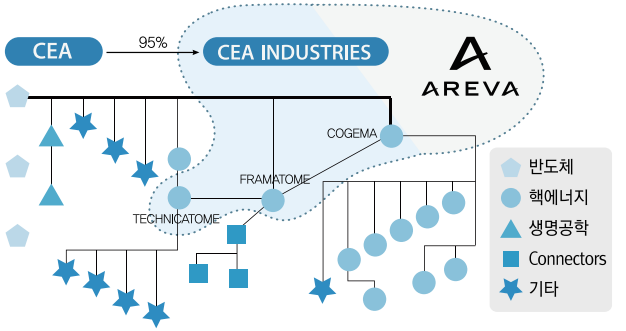
프랑스

전통적인 과학기술 강국 프랑스는 1982년부터 일찌감치 공공연구기관의 기업 설립과 경영 참여를 제도화했다.[1] 이에 따라 INRIA(국립정보기술·자동화연구소), CEA(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 등의 **공공연구기관은 보유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해 많은 자회사를 설립**했다.

공공연구기관이 직간접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포트폴리오 기업의 증가는 이들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와 성과 관리, 새로운 기업 설립 촉진에 전문화된 사업화 관리회사(기술지주회사에 해당) 설립으로도 이어진다. CEA가 설립한 CEA Industries(1995)와 INRIA의 INRIA-Transfert(1998)가 대표적이다.

CEA Industries의 구조

CEA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주식)의 효과적인 출자 및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관리형 기술지주회사인 CEA Industries를 95년에 설립하였으며, 2001년 9월에 CEA 자회사들을 에너지관련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CEA Industries 등 4개 자회사가 Areva로 통합되었다.





덴마크

북유럽의 강소국 덴마크는 2004년 관련법을 제정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촉진** 및 **기업설립과 기존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시작했다.[2] 동시에 덴마크 정부는 투자(자본금 출자) 규모와 사업 분야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 공공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무(public duty)와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기업설립의 투자액이나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기관 전체 연구개발비의 3% 또는 약 75만 달러(500만 크로네)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등이다. 이는 공공연구기관이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에 참여할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현실화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성 약화 우려를 제어하기 위해서다.



스웨덴

국가경쟁력과 이노베이션 지표에서 줄곧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화 정책이 특징이다. 당초 스웨덴의 대학은 정부의 영향력 아래 공공 부문의 하나로서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을 직접 설립하는 등의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또한, 신기술 기반의 창업을 지원할 구조와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로 인해 대학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구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대학 보유기술 기반의 창업 활동 비중이 낮았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 역시 창업을 통한 경제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4년부터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고덴부르그(예테보리)대학이 GU Holding, 웁살라 대학이 UUAB(Uppsala universitets Utveckling AB)[3]를 세우는 등 1994~95년 사이에 11개 대학에서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면서 **대학이 지분을 보유한 기술사업화 기업들이 다수 생겨나게 된다.**

1 「The Research Orientation and Planning Law」
2 Act on Technology Transfer, etc. at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3 GU Holding은 기업 설립, 자본 투자, 지분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설립 후 현재까지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기업은 48개사이다. UUAB는 75개 이상의 기업 설립에 참여하였다.



중국

떠오르는 강대국 중국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연구 부문의 창업을 활용**하였다. 즉,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투자로 회사를 설립해 연구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품화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설립된 학교기업(샤오반 校辦)과 연구소기업(연반 研辦) 중 상당수가 주식회사 형태의 거대 기업집단으로 발전했다. 특히 이들 학교기업과 연구소기업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거대한 시장에 비해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선도자로서의 기회와 이익을 십분 누릴 수 있었다. 중국 정부는 목표대로 시장경제 도입에 성공한 후 2001년부터 이들 샤오반과 연반의 경영을 분리하는 개혁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집단을 관리할 지주회사가 설립돼 회계, 관리, 투자, 인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갔다.

1.3 국내 유사제도

이미 우리나라에도 연구소기업과 유사한 제도로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등 3개 제도가 운영돼 왔다.

이들 유사 제도들은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소기업과 동일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설립(등록·인가) 요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 조건과 함께 고유한 "세제혜택 등의 강력한 지원정책" 등 설립 및 육성정책 측면에서 타 제도와 확연하게 구분**된다.

연구소기업과 국내 유사 제도

	근거규정	제도시행	정의	설립 주체	설립(등록인가)요건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05. 7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 기술지주회사	특구 안에 설립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의 해당 연구소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07. 8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주식회사 설립주체가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
산학연협력 기술지주 회사 및 자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07. 12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회사의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자회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술지주회사〉 ▪ 주식회사 ▪ 상근 전문인력이 1명 이상 ▪ 전용공간 확보 〈자회사〉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 보유 * 2021년6월 23일 이후부터 '100분의 10 이상' 보유로 개정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 4	〈기술지주회사〉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출자회사〉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편입한 회사	공공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등)	〈기술지주회사〉 ▪ 주식회사 ▪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 기술지주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여 보유 〈출자회사〉 ▪ 기술지주회사는 2년 동안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 보유

제2절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기대효과

2.1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은 기술공급자(licensor)일 때보다 연구소기업의 주주(stockholder)로서 **더 적극적으로 기술사업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유·무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01 하나, 가시적인 창조경제 기여도

먼저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사업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기술사업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변화(academic entrepreneurship)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새로운 존재가치를 대내외에 증명하게 된다.

연구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는 이미 수치상으로도 검증이 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구소기업은 2017년 총 매출액 4,739억 원, 고용인원 2,542명으로 모든 실적지표가 매년 빠르게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연구소기업 매출액 및 고용 성과 (단위 : 억 원,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설립수	19	22	29	38	46	89	160	179	181	891	1,108	1,287
매출액	284	430	725	1,208	1,644	2,365	2,921	3,831	4,739	5,507	7,394	9,494
고 용	237	272	310	524	639	850	1,194	1,908	2,542	3,470	3,910	5,103

02 둘, 부문별 장점을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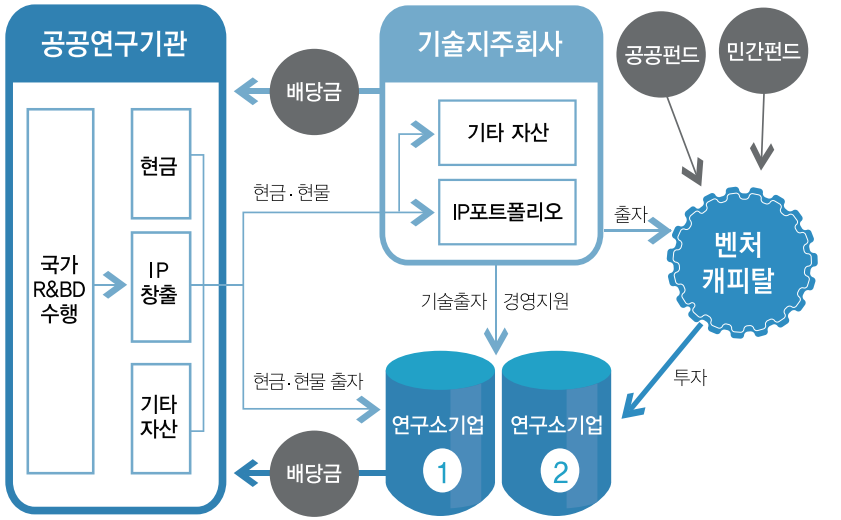
다음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암묵지(tacit knowledge)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합작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술출자로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민간이 축적해온 경영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화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03 셋, 기관-기업의 긴밀한 협조

기술출자를 매개로 **공공연구기관-연구소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출자기업 간에 **매우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Bray and Lee(2000) 등의 여러 연구에서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사업화 기업이 매우 밀접한 협조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소기업의 개념도



04 넷, 현실적인 재원 마련 통로

가까운 미래에 큰 수익이 기대된다. 연구소기업은 **일반적인 기술라이센스 방식에 비해 보다 큰 미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과 수익금 등이 연구소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공공연구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산을 활용해 창출하는 수익은 연구 환경 개선 등 기관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의 현실적 필요를 충족하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제1호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자본납입금(3억 7,800만 원) 대비 318배에 달하는 약 1,202억 원(2017년 11월 1일 종가기준)로 껑충 뛰었다.

05 다섯, 연구원 펄떡이게 할 '기업가정신'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가정신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1]에 따르면, 연구소기업 설립 여부와 설립 건수는 연구자의 창업의지로 표출되는 기업가정신의 확산과 강화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출액, 고용창출, 연구개발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기업가정신의 확산과 강화 역시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중요한 효과로 볼 수 있다.

기술사업화 방법으로써 연구자 창업에 대한 선호도 차이

구 분	연구소기업 보유기관	연구소기업 미보유기관
평균	0.477	0.186
표준편차	0.501	0.393
t	3.527*	
가중치를 반영한 평균 (Wgt. Mean)	0.634	0.186

* $p<0.01$

1 이성상(2014), 연구자의 창업의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소기업 설립 · 운영의 효과,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1호

2.2 공동출자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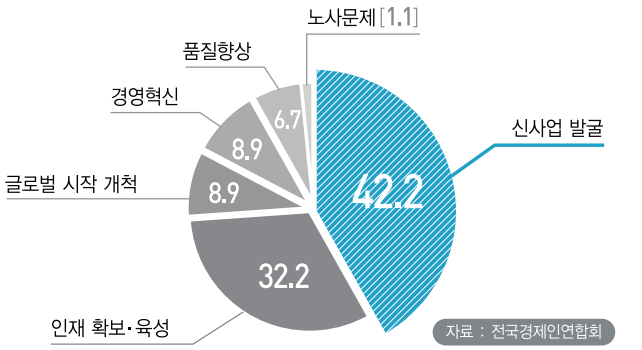
연구소기업 중 '합작투자형'과 '기존기업전환형'은 기업이 현금 또는 현물 출자로 연구소기업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다. 전체 연구소기업의 76%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올해는 특히 연구소기업의 재도약 원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각별하다. 기존 기업이 연구소기업 설립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01 하나, 준비된 성장모멘텀

신사업 발굴과 신규 시장 진출의 기회로 연구소기업을 활용할 수 있다.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관심이 매우 높다. 2015년 전경련국제경영원이 기업 CEO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영활동에서 가장 큰 고민이 '신사업 동력 발굴'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임원의 가장 큰 고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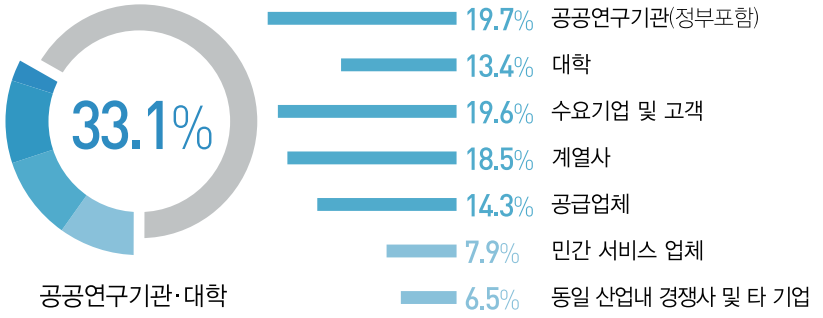


이 결과는 신사업 발굴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편으로 신사업 동력 발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실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기술혁신 조사 결과[1]를 살펴보면 전체 제조업체의 12.2%가 지난 3년 간 신사업 발굴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50%의 기업이 "성과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이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자사가 보유한 다양한 경영자원에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성과 연구개발 능력이라는 날개를 하나 더 다는 셈이다. 따라서 신사업 발굴과 신규 시장 진출의 기회로 연구소기업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02 둘, 준비된 기술, 준비된 파트너

공공연구기관을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과 라인업 다양화를 위한 활동의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기술혁신 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제조기업의 혁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복수 응답)는 공공연구기관(40.7%)과 대학(31.8%)이었으며, 가장 유용한 협력파트너 역시 공공연구기관(19.7%)과 대학(13.4%)을 선택한 기업이 많았다. 특히 기술출자를 매개로 기업은 공공연구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가장 유용했던 협력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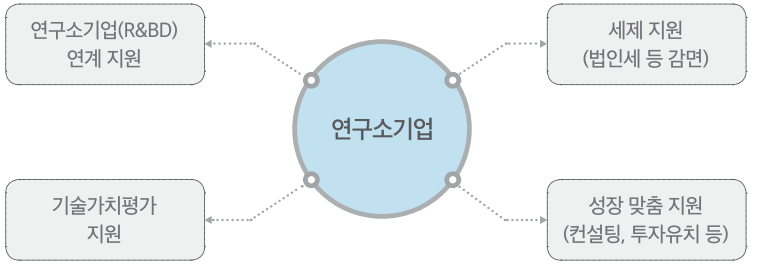
03 셋, 공신력 있는 브랜드

연구소기업이라는 브랜드는 소비자(시장)에게 우수한 기술역량, 신뢰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제품의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소위 중소기업 디스카운트(discount)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브랜드의 반복적 노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에 연구소기업이라는 브랜드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04 넷, 각종 지원책

현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명시된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인력·설비·비용 등의 지원,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로부터 5년 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100% 감면 등 다양하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정책적으로 사업화개발 자금지원 등 연구소기업만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시행 중에 있다.

연구소기업 지원 내용



1 하태정·강희종·손창수·김민재, 「2012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콜마
Win-Win Case Study

제1호 연구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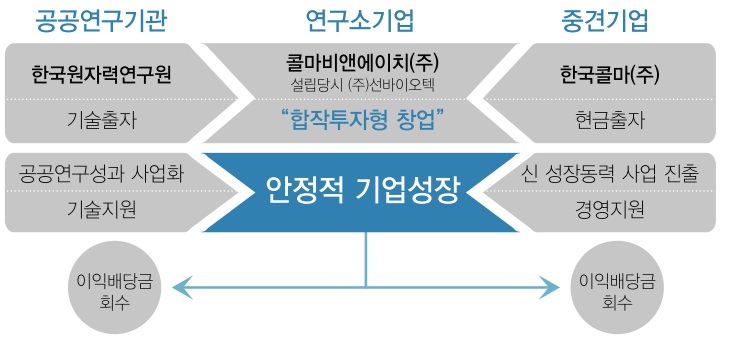
콜마비앤에이치(주)

kolmar
Kolmar BNH

기업현황

설립자본금	10억원(2006년 3월 설립)
시 가 총 액	1조 4,860억 원(2021년 2월 1일 기준)
고 용 인 원	10명('06) →280명('19)
매 출 액	12억원('06) →3,845억원('19)

성공사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효과

2015년 2월
코스닥 상장

- **설립지원** / 기술가치평가 0.2억 원 지원
- **육성지원** / R&BD자금 11.5억 원 지원
- **법인세감면** / 법인세감면 14억 원('12년말 누적)
- **매출, 고용** / 연평균 70% 성장('17년 매출 2,989억 원, 216명)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공공연구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공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술출자로 콜마비앤에이치(구 선바이오텍) 설립에 참여해 연구소기업의 성공 시대를 열었다. 당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던 때. 원자력연과 한국콜마는 오랜 논의 끝에 '기술출자'라는 새로운 답안을 찾아냈는데 이는 대개 일회성에 그쳤던 기술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보유기술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3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원자력연은 적극적인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업화에 적극 참여하였고, 연구실에 갇혔던 우수기술은 자본·유통망·제조기술·마케팅 등 민간기업의 인프라와 결합하며 '포텐'이 터졌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상장으로 원자력연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최초납입금 대비 522배 증가했다. 기관 차원의 든든한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 역시 막대한 기술료 수혜가 기대된다.

하지만 원자력연이 거둔 가장 큰 성과라면 역시 출연연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공공기술의 국민경제 기여'라는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존재가치를 대내외에 증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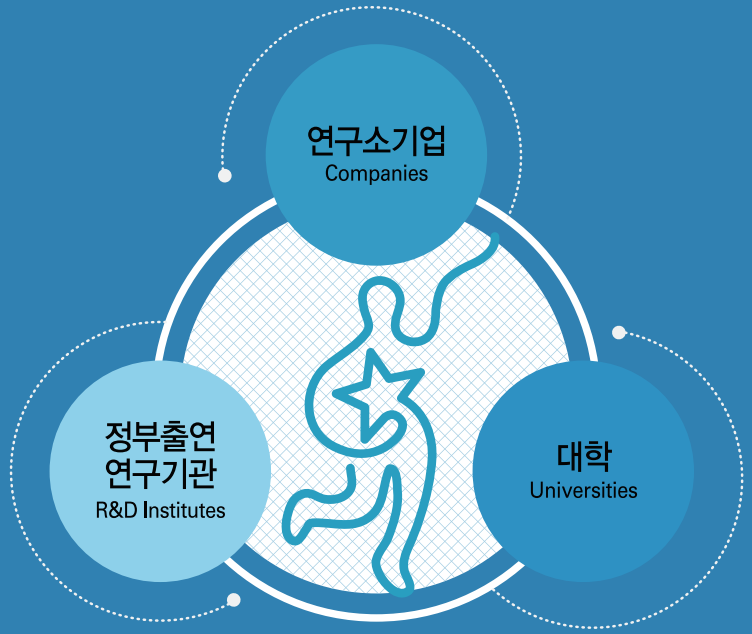
kolmar

공동출자기업(한국콜마)의 성공

신성장동력을 찾던 화장품 기업 한국콜마는 원자력연과 공동개발 중이던 방사선 이용 고순도 정제기술을 자사의 제조 인프라와 결합하면 항암치료 보조식품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막 생겨난 연구소기업 제도는 기술사업화의 비옥한 토양이 됐다. 미완성 상품인 기술이 제품화되기 위해서는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간 끊임없는 조율과 커뮤니케이션이 꼭 필요하다. 이전의 기술이전과 달리 연구소기업 제도는 사업화 과정에서 이 둘을 파트너로 단단히 결속시켜 상용화 성공률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연구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역시 초기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설립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00%,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연구소기업'이라는 브랜드 효과는 대표상품 '헤모힘'이 국내 최초로 식약처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승인을 받기까지 큰 힘이 됐다. 또한 연구소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상장심사와 주가형성에도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콜마비앤에이치의 2020년 매출액은 3,845 억 원 .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의 주가 역시 함께 상승 중이다.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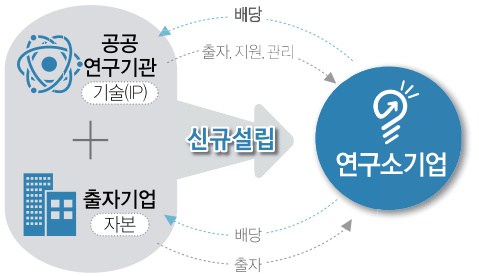
연구소기업 설립 가이드북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지원

제1절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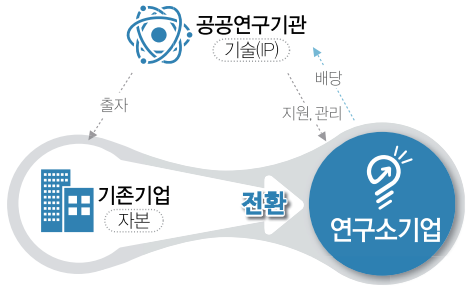
1.1 설립 유형

연구소기업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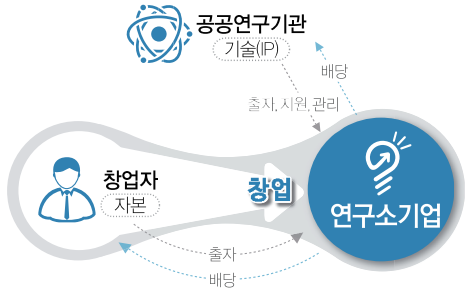
1 합작투자형

공공연구기관과 기존 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2 기존기업전환형

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금 또는 현물출자해 해당 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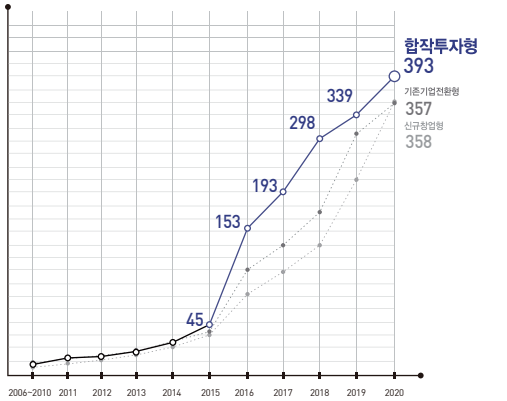


3 신규창업형

공공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2020년 말 기준 설립된 1,108개 연구소기업을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합작투자형이 393개(36%), 기존기업전환형 357개(32%), 신규창업형 358개(32%) 입니다.

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구소기업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해 해당 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기존기업 기술출자형)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합작투자형이 크게 증가해 현재는 합작투자형 연구소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 설립 유형별 특성

1) 합작투자형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의 결합을 통해 기술사업화 추진 과정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사업 발굴, 신규 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 가능

2) 기존기업전환형

- 공공연구기관이 출자하는 기술이 연구소기업으로 전환되는 기존기업의 사업영역과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추진이 용이
- 연구소기업 전환 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3) 신규창업형

- 연구소기업의 대표 또는 경영진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매우 높다는 장점
- 판로개척, 마케팅, 인사관리, 투자유치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경험이 부족
- 빠른 시장 진입 및 초기 사업 안정화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앞서 연구소기업이 일반적인 연구기반 스핀오프(research-based spin-offs)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전문성·연구개발 능력과 기업의 다양한 경영자원·보완자산 결합의 '시너지 효과'를 들었다. 이처럼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본다면 신규창업형보다 합작투자형 등이 연구소기업의 장점을 활용하는 데 보다 유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제1절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합작투자형

'합작투자형'의 경우 연구소기업 설립에 참여하는 모기업이 일반적으로 풍부한 자본력과 양질의 경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이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헬셀

HELSEL



〈농업용방재드론 케레스 10S〉

2006년에 설립된 ㈜헬셀은 가공 · 조립중심의 드론유통기업이다. 커져가는 드론시장의 Frist Mover가 되기 위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로부터 '로터부의 비상정지 기능을 갖는 무인 비행체 기술을 통한' I '자형 기체 개발 기술'을 출자받아 연구소기업인 ㈜신드론을 2015년 9월에 설립하였다.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출자기술의 기반 제품 사업화를 총괄하여 매진한 결과 벼재배를 위하여 필수적인 농약 살포 장치인 10리터급 방제드론(케레스 10S) 개발에 성공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드론축구대회에 대한 컨셉을 고안하고 2017년 7월 완제품 드론축구공 스트라이커 생산하는 등 전세계 항공연맹 FAI에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은 드론스포츠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드론은 마케팅과 홍보적인 측면에서 상호명을 ㈜헬셀로 변경이후, 2018년 6월 모기업을 역으로 인수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연구소기업 설립 4년만에 167억원을 돌파에 성공!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드론 업체로 발돋움 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에너캠프

ENERCAMP 에너캠프



스마트배터리 제조기업인 ㈜에너캠프는 기존 제품의 기술지원 및 성능향상을 위해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로부터 계명대학교의 '스위칭모드 전원장치의 병렬연결 회로 장치 및 그 제어방법' 기술 출자를 받아 2017년에 연구소기업 설립하여 성장 발판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창업 이듬해인 2018년에는 미국과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아마존 입점에 성공하는 등 국내 서비스 만족 대상을 수상할뿐만 아니라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테고리 1위에 올라 차후 2022년까지 수출 520만 달러가 목표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에 ㈜에너캠프는 스마트배터리 충전기 전문기업으로 해외유통채널을 넓히고, 국내 B2C 시장 판매 1위에 이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시장 확대를 통해 미래의 기술을 현실화하는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제1절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기존기업 전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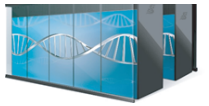
'기존기업전환형' 역시 연구소기업 제도를 활용하기에 유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출자 기술이 기존기업의 사업영역과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소기업 전환과 기술사업화 추진이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연구소기업 전환 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존기업전환형은 협력기업의 규모가 합작투자형에 비해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기업전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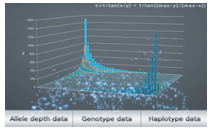


㈜신테카바이오

Syntekabio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PMAP Platform〉
개인유전체맵 플랫폼

신테카바이오는 보유한 자체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유전자 검사전용 슈퍼컴퓨팅' 이전 받아 플랫폼으로 완성했다. 이를 계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를 만들 수 있었고, 2014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소기업이 됐다. 신테카바이오는 출연(연)으로부터 슈퍼컴 기술이전과 동시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술가치평가와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 등의 사업지원을 받으며 대덕특구에 정착했다. 연구소기업에 주어지는 다양한 성장지원 혜택들을 바탕으로 2019년 12월 성장성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입성, 코로나19 약물 후보물질 개발에 참여하는 등 'K-바이오 분야'를 주도하는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링크옵틱스

광융합 의료기기 전문기업
LINKOPTICS



〈벨라룩스-의료기기 2등급〉



〈벨라룩스 라이트-의료기기 2등급〉



〈루미니엘-LED패치〉



〈링크마마-화장실기립보조기기〉

2004년 설립되어 광통신부품 (Optical Components)를 생산하여 국내외 통신사에 공급하여 왔으나, 중국업체 대비 경쟁력 저하로 신규사업을 모색하던 중 광주광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광융합 의료기기 제조분야를 신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의료분야는 시장은 넓으나, 특성상 수요를 파악하여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품 판매 또한 의료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큰 어려움을 겪던 중 산업은행 본점의 소개로 가톨릭관동대 기술지주(국제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와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제품개발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보유한 기술을 다양한 치료 분야에 접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제품의 개발 단계와 임상 종료까지 해당병원 전문가들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링크옵틱스는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를 포함한 상급 병원 5곳과 5개의 주요 질환에 대한 제품 임상을 약 2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화장실 낙상사고를 방지하는 기립보조기기 국내 첫 국산화 제품인 링크마마를 개발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던 중 연구소기업 지원을 위한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장:한상문)의 도움으로 2020년 조달청 혁신시제품에 선정되어 전국 공항과 지자체 160개소 시범 설치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제1절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신규창업형

'신규창업형'은 대부분 출자기술의 개발을 주도하였거나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한 연구자 또는 연구팀이 연구소기업의 창업자로 참여한다. 이는 연구소기업의 대표 또는 경영진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로개척, 마케팅, 인사관리, 투자유치 등 경영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설립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투자형·기존기업 기술출자형에 비해 시장 진입과 사업 안정화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출자(이전) 받아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



㈜수젠텍

Sugentech
(주)수젠텍



〈인클릭스(바이오마커 기반 분석기기)〉



〈임신테스트기〉



〈코로나 진단키트〉

2011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비쿼터스 바이오칩 리더기'를 기술이전받아 창업한 수젠텍은 체외진단 플랫폼 및 진단기기 전문기업으로 종합병원에서 개인까지 모든분야의 플랫폼을 갖춘 글로벌 수준 경쟁력을 갖춘 국내 체외측정분야 선도 기업이다. 창업부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하며 설립초기 연구소기업 R&BD, 토탈디자인사업등을 통해 출자 기술의 상용화 및 마케팅을 지원받았으며,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통하여 4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아 창업 당시 체외진단분야가 생소한 분야였음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연구소기업 제도의 안정적인 지원 아래 유연하게 제도와 지원을 맞춰나가며 수젠텍은 2016년 코넥스 상장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까지 지속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체외측정업계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수젠텍은 지난해 항원 신속진단키트와 항체 신속진단키트, 중화항체 검사키트 등 다양한 코로나 19 진단키트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수젠텍의 항체 신속진단키트는 지난해 국내기업 최초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은 항원신속진단키트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에 납품하였고, 21년에는 중화항체 진단키트가 유럽 CE 인증을 받았다.

㈜멤브레어

주식회사 멤브레어
MEMBRARE



㈜멤브레어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출자한 '폴리케톤 다공성막의 제조방법,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폴리케톤 다공성막 및 폴리케톤 평막형 분리막' 기술을 사업화한 신규창업형 연구소기업이다. 창업자의 오랜 분리막 연구 경력을 더불어 ㈜멤브레어는 기존 수처리 분리막 기술을 뛰어넘는 고성능 필터 제조하고, 고부가가치의 정밀화학산업에서 사용되는 독성이 강한 용매 속에 원하는 물질을 분리해 정제하는 특수필터제조 및 공정 개발 기업이다. 최근, 중국 합작법인회사 50억의 기술가치 평가를 인정받았고, 합작사 지분 30% 보유하고 중국 자본 70% 출자로 중국에서 170억 자본금을 가진 회사를 설립해 운영중이다.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투자청 등 유럽 투자사, 현지 컨설턴트사와의 업무협약을 진행중이며, 그린환경, 그린멤브레인의 가치로 세계 유기용매 분리막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소기업으로 도약중이다.

제2절 연구소기업 설립·운영 관련 규정

연구소기업 제도는 2005년 1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現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동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2절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및 시행령,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운영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연구소기업 설립 관련 규정

(1) 설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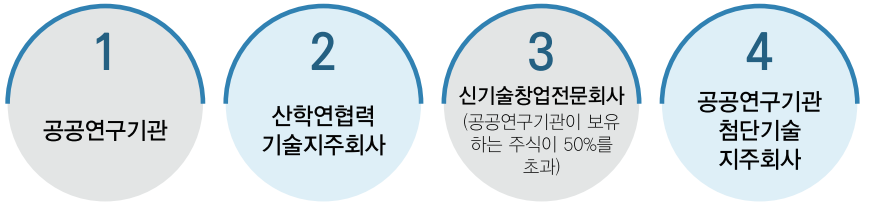
연구소기업의 설립 목적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것이다.
사업화의 대상인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적용한다면 '기술'에는

1.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2. 1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3. 1 또는 2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등이 포함된다. '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목적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설립 주체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유형에 속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2005년 연구소기업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 '특구 내'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2010년 3월 시행)되며 특구 안의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특구 안으로 한정되었던 설립 주체의 지역적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이 되면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자회사를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이란...?

특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등
-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부터 R&B비용으로 연간 50% 이상을 출연(보조)받는 법인
- 과학기술의 연구, 조사, 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 연구중심병원

* '18.5.8 '특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보유 주식 비율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연구소기업 주식(지분 포함) 중 10%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둘 이상의 주체가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관 또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한 비율이 해당하는 자본금 규모의 요건 비율 이상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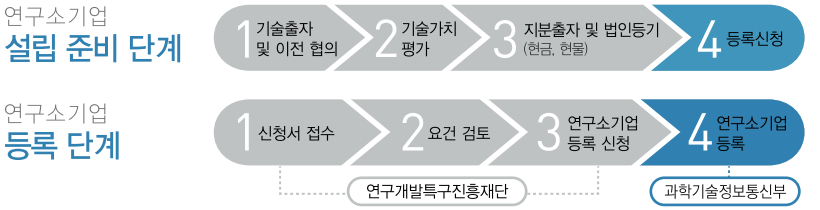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공공연구기관 등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할 수 있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뿐만 아니라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설립 지역

2009년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되면서 설립 주체의 지역적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특구 밖의 기관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연구소기업은 특구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4] 특구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연구소기업 설립 등기 시 본점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는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연구소기업 등록

연구소기업이 설립한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등록신청서 2.정관 3.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4.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5.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 포함)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42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진흥재단을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게 된다.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2.2 연구소기업 운영 관련 규정

(1) 연구원의 휴·겸직

연구개발특구법은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휴직하거나 겸직으로 연구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 휴직기간은 3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겸직에 관해서는 기간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겸직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보유 주식 비율 변동 등 연구소기업 등록 내용 변경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및 운영 자금 마련, 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增資)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도운영 초기에는 공공연구기관 등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기업 주식 비율이 해당하는 자본금 규모의 요건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돼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주식보유 비율이 5%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추가개정하여 동일 조건에 대해 유예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였다.[2] 한편 주식 보유 비율 변동을 포함하여 연구소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42조는 연구소기업 등록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소기업 변경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지주회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규모가 해당하는 구간의 주식보유 비율 요건(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10%)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주식 보유 비율이 5% 이상일 경우에는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3) 법인세 감면 등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

연구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된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3] 다만,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로 간주한다. 또한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 합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의 제3항 각 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감면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도 적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조례 제5546호, 2021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취득세 면제이다.[4]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 제2항은 연구소기업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액 감면 외에도 연구소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연구개발특구법 등에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연구소기업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6]

또한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바탕으로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 등 연구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소기업 설립혜택

국세	지방세*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3년간 100%(최저한세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최저한세 부과)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감면	면제

* 특구별 시세 · 도세 · 군세 · 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상이함
※ 감면 특례의 제한 및 감면범위는 각 관련 법령을 따르므로, 국세청 혹은 관련 지자체와 상의

(4)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등의 사용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되어있다.

구분	분류항목
우선 사용 권고 항목	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② 연구소기업 재출자, ③ 성과 사업화 경비,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여 인력 · 부서 보상
사용가능 항목	⑤ 기관운영경비

〈 공공연구기관 수익금 배분 가이드라인 〉

분류항목	비율	내용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5% 이상	R&D투자 10%, 사업화 후속R&BD 등 15%
2. 연구소기업 재출자	5% 내외	신규 연구소기업 출자 및 기존 연구소기업 재출자
3. 성과의 사업화 경비	10% 내외	IP관련 비용, 기술마케팅, 기업 협력 등
4. 보상금*	60% 이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여 인력 · 부서에 대한 보상금
4-1. 기술개발 인력 · 부서 보상	50%~90%	성과 기여도에 따라 배분
4-2. 사업화 기여 인력 · 부서 보상	10%~50%	내부 TLO, 외부 사업화 전문기관 등
5. 기관운영경비	나머지	기관 차원의 간접비(가급적 지양)

*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소기업 수익금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익금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1항
4 특구별 지방세 혜택 부록 * 부록 74p 참조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4항

제3절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는 설립 유형(합작투자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신규창업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출자기술을 발굴하여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와 외부 기업이 공공연구기관에 연구소기업 설립을 제안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도 설립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1.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2.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선정 3.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4.출자대상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5.사업계획서 작성 및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6.출자 완료 및 법인 등기 7.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의 절차는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설립 절차	주요 업무
1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 출자 기술 발굴 ▪ 기술 출자의 타당성 검토 [해당 기술의 출자 가능 여부 확인, 해당 기술의 우수성 검토, 해당 기술의 사업화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 방식의 타당성 검토(수요 기업이 제안하는 경우), 기술 수요 기업의 사업화 역량 검토] ▪ 심의 및 선정
2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및 공동 출자자 선정	▪ 단독 또는 공동 설립 여부 결정 (공공연구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 공동 출자자 (합작투자기업, 연구소기업 전환 예정 기업, 창업자) 발굴 (설명회 개최 등) ▪ 공동출자자 평가 및 선정
3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 설립 주체 간 기본 합의서 작성 및 체결 (출자 대상 기술 선정, 설립 주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합의점에 도달한 내용)
4 출자대상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	▪ 기술평가기관 선정 ▪ 기술평가 신청, 계약체결, 평가진행, 평가서 수령
5 사업계획서 작성 및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 사업타당성 평가 (기술평가기관) ▪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및 확정 ▪ 연구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 내부 규정 정비
6 출자 완료 및 법인 등기	▪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 체결 ▪ 현물(기술 등) 및 현금 출자 ▪ 법인 등기 (설립등기, 변경등기) ▪ 연구소기업 설립 결과 보고
7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 등록 신청 (특구진흥재단) ▪ 등록증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연구소기업 설립의 첫 번째 단계는 출자 대상 기술을 발굴·평가하고 선정하는 것이다. 출자 대상 기술을 발굴·선정하는 과정은 기술이전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출자 대상 기술선정

공공연구기관이 출자 기술을 발굴하여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출자 기술 발굴이 이루어진다.

첫째, 연구개발 책임자 또는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자가 출자 대상 기술에 대한 개요, 출자 목적 및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등이 포함된 기술 출자 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심의를 거쳐 출자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이전 과정에서 연구부서 또는 연구자가 기술이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술이전 전담부서나 기술이전 심의회에서 계획서를 검토하는 것과 마찬가지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연구부서 또는 연구자가 작성한 기술 출자 계획서는 기술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술이전 전담부서나 기술이전 심의회에서 검토할 수도 있고, 별도로 운영되는 연구소기업 지원 조직(기술출자 심의회, 기술지주회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출자 대상 기술을 평가, 선정할 수 있다.

둘째, 기술이전 전담부서나 연구소기업 지원부서 등에서 공공연구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술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고, 발명자 인터뷰 등을 거쳐 출자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다.

타당성 검토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타당성 검토는 **출자 대상 기술 그 자체의 우수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의 사업화(활용)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이라는 방식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출자 대상 기술의 우수성은 기술의 특성이나 적용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 평가 시 많이 적용되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출자 대상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는 먼저 기술성 및 시장성을 평가하여 1차 선별하고, 선별된 기술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높은 기술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2단계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연구소기업의 목적이 기술의 직접 사업화에 있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 가능성에 비중을 두어 출자 대상 기술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공동출자 기업을 발굴하는데도 유리하며, 투자회수

제3절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술의 특성이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연구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성에 맞는 기술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단계에서는 출자 대상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당 기술의 사업화(활용)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이라는 방식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연구소기업 설립이라는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기술 출자에 따른 기술적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 연구소기업 설립의 기대효과를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먼저 특정 기술을 출자하였을 경우 국가, 지역사회, 공공연구기관에 미치는 기술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을 출자하였을 경우 향후 연구개발이나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연구소기업이 폐업하거나 출자한 기술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었을 때 해외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대형 기술에 속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반면에 기술을 출자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력이 크게 강화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인지, 향후에도 공공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기술인지를 검토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또한 출자 대상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로 연구소기업이 설립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출자 대상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공동출자 기업이 있는 기술이라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의 결합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이전 과정에서 기술수요자의 기술 도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수요자가 기술도입을 위한 사양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기술수요자에게 적합한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부 기업이 공공연구기관에 연구소기업 설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확보, 발명자 인터뷰, 기술이전 심의회나 연구소기업 지원 조직을 통한 평가와 심의의 과정을 거쳐 출자 대상 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수요기업이 요청하는 기술의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해당 기술의 권리 관계 확인, 기술실시권 허여 여부 확인, 발명자 인터뷰 등을 통한 기술 사업화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기술 출자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해당 기술이 출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출자 대상 기술로 선정하기 위해 기술수요기업(공동출자 기업)의 사업화 역량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당 기술의 사업화(활용)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이라는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술 수요 기업의 사업화 역량은 기술수요기업의 재무상태, 기술 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기술의 사업화(활용)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이라는 방식의 타당성 검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 출자에 따른 기술적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 연구소기업 설립의 기대효과를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발굴 절차와 타당성 검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타당성 검토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 책임자 또는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자 ↓ 기술 출자 계획서 ↓ 심의 및 선정 (기술이전 전담부서 또는 연구소기업 지원 조직 등) 기술이전 전담부서 또는 연구소기업 지원부서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선별 ↓ 발명자 인터뷰 ↓ 심의 및 선정	1. 출자 대상 기술의 우수성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성에 맞는 기술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 필요 2. 출자 대상 기술의 사업화(활용)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 방식의 타당성 ▪ 기술 출자에 따른 기술적 또는 사회적 파급 ▪ 효과 검토 ▪ 연구소기업 설립의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검토
외부기업	기술 수요기업(공동출자 기업) 제안 ↓ 기술 확인 ↓ 발명자 인터뷰 ↓ 심의 및 선정 (기술이전 전담부서 또는 연구소기업 지원 조직 등)	1. 기술의 출자 가능 여부 ▪ 해당 기술의 권리 관계 확인, 기술실시권 허여 여부 확인 ▪ 발명자 인터뷰 등을 통한 기술 사업화 가능성 검토 등 2. 기술 수요기업의 사업화 역량 ▪ 재무상태, 기술 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경영 능력 등의 확인 3. 출자 대상 기술의 사업화(활용)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이라는 방식의 타당성 ▪ 기술 출자에 따른 기술적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 등

(2)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선정

출자 대상 기술이 선정되면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를 선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는 연구개발특구법에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의 기관 또는 회사(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와 연구소기업 설립에 참여하게 되는 공동출자자(합작투자기업(합작투자형), 연구소기업 전환 예정 기업(기존기업 기술출자형), 창업자(신규창업형))를 의미한다.

설립주체의 4유형

먼저 연구개발특구법에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의 설립 주체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의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출자 대상 기술들을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자본을 출자하고,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출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연구소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에트리홀딩스가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사례,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미래과학기술지주(주)가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사례 등이 이에 속한다.

공동출자자 선정

연구소기업 설립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협력파트너 즉, 공동 출자자(합작투자기업, 연구소기업 전환 예정 기업, 창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규 창업형의 경우 공동 출자자인 창업자는 출자기술의 개발을 주도하였거나 개발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자 대상 기술을 발굴·선정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도 같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를 포함하여 공동 출자기업(합작투자기업, 연구소기업 전환 예정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으로는 불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기술에 대한 이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술평가 단계에서 대상기술의 잠재 고객군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아웃바운드(outbound)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공동출자자 발굴 과정을 거쳐 확보된 후보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설명 자료, 연구소기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추진 계획 등의 기초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1차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자금조달능력과 같은 경영역량 등을 확인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CEO 인터뷰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경영역량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승인을 통해 공동출자자로 최종 선정된다.

공동출자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기술 출자에 따른 기술적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동출자자의 선정은 성공적인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절차이다. 공동출자자 선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출자자의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경영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만 출자 대상 기술 선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특성이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연구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성에 맞는 공동출자자 선정 방법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와 공동 출자자가 선정되면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게 된다. 기본 합의서는 연구소기업 설립에 참여하기로 한 설립주체와 공동 출자자 등이 출자 대상 기술 선정, 설립 주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합의점에 도달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다. 향후 계속하여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을 토대로 최종적인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 합의서는 예비적 합의서(Preliminary Agreement) 또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기본 합의서에는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및 출자자, 연구소기업 설립 형태 및 예상 시기, 출자 대상 기술의 범위, 기술가치 평가 방법 및 비용, 기술 출자 방식, 예상 설립 자본금 규모, 참여기관별 출자 자산의 종류와 출자 비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중 기술 출자 방식은 소유권 이전(양도) 형태의 출자,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여 형태의 출자 등이 활용되는데 기술 사용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형태의 기술 출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등에는 기술출자 방식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5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절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출자 자산의 종류와 출자 비율과 관련해서는 출자 대상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사업화 방법, 투자 유치 계획, 향후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자본금 규모, 출자 자산의 종류, 출자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4) 출자대상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기본 합의서 체결이 완료되면 기술의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가 진행된다. 연구개발특구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할 수 있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는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뿐만 아니라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와 같은 무형의 기술자산은 부동산, 연구시설 등과 같은 유형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그 가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평가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290조는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의 가치평가, 현물출자의 이행, 현물출자의 검사 등은 반드시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해 출자된 기술에 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기술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공인된 감정인에 의해 작성된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결과를 법인 등록 시 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기술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특례조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같은 법 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이 포함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020년 3월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기술평가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9년	국가기술표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년	NICE평가정보(주) 2016년	
(주)윕스	특허법인 다래 2017년	
특허법인 다나	(주)이크레더블	
특허법인 도담 2018년	한국기업데이터(주)	
(주)나이스디앤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19년 공공	
(주)티밸류	(주)케이티지 민간	
신용보증기금 2020년 공공		

기술가치평가 신청 및 평가 절차는 평가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기술평가 절차가 신청·접수 → 예비평가 → 본 평가 → 평가심의 → 평가결과 통보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평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현재 연구개발실용화진흥원 등 유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개발실용화진흥원에서는 접수 및 대상선정을 담당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시장성 및 사업성 평가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의 5개 연구기관이 분야별로 기술성 및 권리성을 평가한다.
또한 2015년 4월부터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별다른 추가절차 없이 무료로 연구소기업 출자대상기술의 가치평가를 희망기업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그밖에 현물출자 된 자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으로 감정평가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등이 있다.

(5) 사업계획서 작성 및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기술평가가 완료되면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에 포함된 각 참여기관별 출자 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현금 또는 현물 출자 규모가 확정되게 된다.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 합의서에서 정한 설립 주체별 출자 비율이나 설립 자본금 규모 등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 기술의 종류, 설립 자본금 규모, 출자 비율 등이 확정되면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내부 심의절차를 거치게 된다. 내부 심의절차에 앞서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와 공동 출자자 간의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 체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약정 체결은 일반적으로 기술평가 완료 이후부터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이전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다. 이는 정해진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와 공동 출자자가 협의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점에서 약정체결을 하게 된다. 본 자료에서는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에 대한 내부심의 완료 이후에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 체결을 다루기로 한다.

'사업계획서'는 출자 기술의 사업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활동의 결과물로 출자 기술의 사업화에서 무엇이 기회(opportunity)인가를 설명하고,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 또는 활용할 것인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소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 또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사업의 내용 ▲사업화 추진 방법 ▲기술의 시장성 및 판매전망 ▲수익성 ▲자금조달 계획 ▲인력충원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서식은 아래와 같다. 특히,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서식

요 약 문

1. 설립 목적
2. 설립기관 개요
3. 연구소기업 현황
4. 출자내역 및 비율
5. 사업계획

Ⅰ. 연구소기업 개요

1. 설립목적 및 배경
2. 추진경위
3. 설립기관 개요
4. 연구소기업 현황

Ⅱ. 출자계획

1. 연구소기업 주주현황
2. 설립기관 세부출자내역 및 비율

Ⅲ. 사업계획

1. 사업내용
2. 시장현황 및 전망
3. 추진계획
4. 기대효과(사업타당성평가)

제3절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사업계획서의 일반적 구성과 실제 연구소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는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사업계획서 서식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다.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과정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추후에 서식에 맞게 수정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일반적 구성	연구소기업 A의 사업계획서	연구소기업 B의 사업계획서
▪ **회사 개요**	▪ **연구소기업 개요** (설립목적 및 배경, 추진경위, 설립기관 개요, 대표자, 경영진 현황, 조직구성)	▪ **연구소기업 개요** (설립목적 및 배경, 추진경위, 설립기관 개요, 대표자, 경영진 현황, 조직구성)
▪ **조직 및 인력 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조직 및 인력 구성 특징, 주주 현황, 조직도, 고용 계획 등)	▪ **출자계획** (연구소기업 주주현황, 설립기관 세부 출자내역 및 비율, 출자 대상 기술 및 기술출자 금액)	▪ **출자계획** (연구소기업 주주현황, 설립기관 세부 출자내역 및 비율, 기술출자 현물 상황)
▪ **기술 및 상품(서비스) 개발계획**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특허 보유 등 기술현황, 기술 및 상품 개발 현황 및 투자계획)	▪ **사업화 제품 및 사업 내용** (사업화 제품, 사업 내용)	▪ **사업내용** (기술개요, 특허 현황, 기술의 적용 가능 제품 및 서비스)
▪ **생산 및 시설계획** (생산 및 시설 현황, 생산 공정, 원부자재 사용 및 조달계획, 시설 투자 계획, 공장입지 및 공장설립 계획)	▪ **국내외 시장 규모**	▪ **국내외 기술동향** (국내 기술동향, 국외 기술동향, 기술 경쟁력, 기술의 파급성)
▪ **시장성 및 판매계획** (관련 산업의 최근 상황, 동업계 및 경쟁회사 현황, 시장 규모 및 자사 제품 수요 전망, 연도별 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판매계획 및 전략** (판매계획, 경쟁사와의 차별화 전략, 시장 진입 전략, 해외시장 진출계획, 수출 가능성)	▪ **사업성** (수요 특성, 공급 특성,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 해외 시장 규모, 시장의 특성,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 **재무계획** (재무현황 및 추정, 향후 수익 전망)	▪ **추진계획** (단계별 발전 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성공계획)	▪ **기술개발 추진 형황 및 향후 추진 계획** (현재의 제품 개발 상태, 성능평가 결과, 기술개발 문제점 및 대책)
▪ **자금 운용 및 조달계획** (소요자금, 조달계획, 연도별 증자 및 차입계획, 자금조달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 **재무계획** (추정손인 계산서)	▪ **양산체제 구축계획** (연도별 생산 목표, 생산 공정 및 외주 생산 활용 등 생산 체계, 주요 원부자재 조달방안, 완제품 생산 계획)
	▪ **조직구성 및 인력계획** (조직구성, 인력계획)	▪ **사업화 전략 및 추진계획** (사업화 전략, 사업화 추진 전략)
	▪ **기대효과** (사업타당성평가)	▪ **인력 운영 계획**
		▪ **기대효과**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설립에 관한 내부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기술 출자, 연구원 인력파견(휴직 또는 겸직),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배분 및 활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의 내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연구소기업 설립 및 지원 규정'을 2007년부터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출자 지분 수익 배당 및 사용, 연구원의 겸직 및 파견, 연구소기업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에는 '창업 및 출자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연구소기업의 정의, 창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업의 설립 및 기술이전, 창업자의 휴직, 창업자에 대한 지원, 실시권 허여 및 주식 보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출자 완료 및 법인 등기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에 관한 내부 심의가 완료되면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와 공동 출자자 간의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이 체결되고, 약정에 따라 현금 및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약정

앞서 살펴본 기본 합의서가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합의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예비적 합의서 또는 양해각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약정'은 연구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담은 합의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약정서의 모든 내용은 향후 연구소기업의 정관에 반영되거나 설립 이후의 모든 활동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또한 약정서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응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서의 주요 내용

1. 연구소기업 설립 시기 및 소재지 (본점, 사무소 등)
2. 사업 목적
3. 출자내용(기술 및 현금)에 관한 사항
4. 정관제정에 관한 사항
5. 설립 시 자본금 및 출자비율
6.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
7. 이사 및 감사선임에 관한 사항
8. 주식양도 및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9. 출자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10.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 상기 내용은 양자간 합의에 따라 다소간 변경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부록의 '양식' 참고

제3절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약정서 작성 시에는 향후 연구소기업 설립, 운영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여 기관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약정서에 명확한 용어와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 적격성 및 대리행위의 유효성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 체결 전에 법인법,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법인등기

법인 등기는 합작투자형, 신규창업형과 같이 신설법인이 만들어져 설립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기존 기업 기술출자형과 같이 신주의 발행 등으로 인해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317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방식 모두 가능하다.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연구소기업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발기설립'은 연구소기업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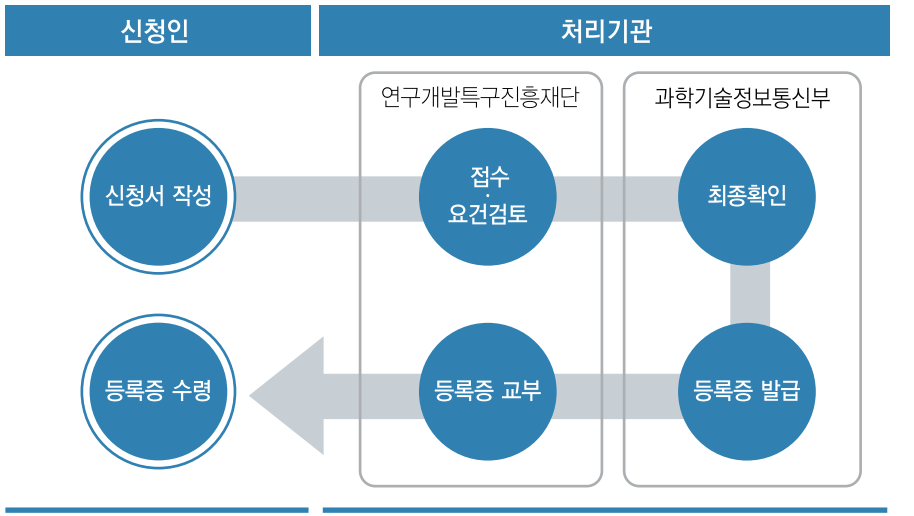
상법 제317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현금출자 이행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심사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설립 승인 신청서 접수 → 40일 이내(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 연장 가능) 설립 승인 여부 통지 → 설립등기 → 설립등기 30일 이내에 사실 통지'의 순서로 연구소기업 설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 3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규칙 제4조가 개정되면서 설립 승인 절차가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이전에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고,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이 연구소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7)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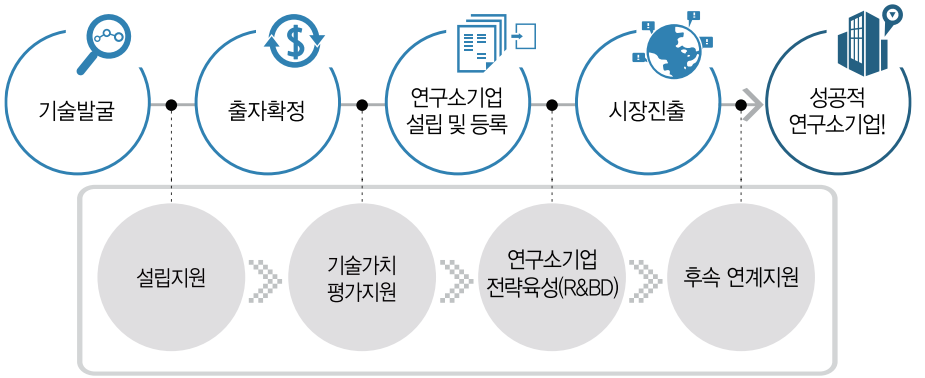
법인 등기와 함께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와 함께 정관, 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소기업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확인을 받게 된다.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의 서식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규칙(서식 4.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서식 1.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받게 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재단을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게 된다.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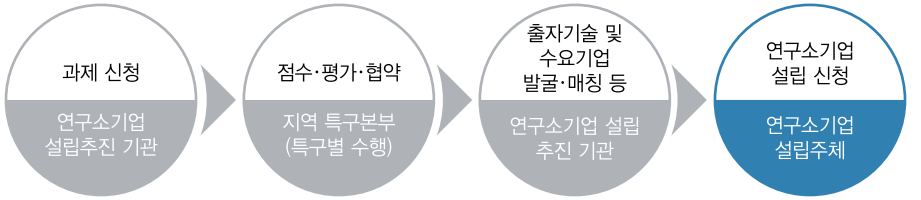
제4절 연구소기업 지원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소기업 설립 이전 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에 걸쳐 연구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연구소기업 제도는 특성상 설립단계에서 일반적인 창업 또는 자회사 설립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연구소기업 설립의 사전검토단계에서 필요한 기획과정 즉, ▲비즈니스모델링 ▲공공기관 우수기술 및 민간기업 수요발굴 ▲협력대상기업 탐색·매칭 ▲법률회계 등을 지원한다. 연구소기업 설립을 검토 중인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예비창업자 모두가 대상이 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구소기업 사전기획 절차]

연구소기업 가치평가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예정) 기술의 가치평가 또는 이를 통한 사업타당성평가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9조의3에 따른 기관이나 기업이 그 대상이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직접 가치평가를 진행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평가 절차]

연구소기업 사업화(R&BD) 지원

창업초기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과제에 참여하여 R&BD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특구법 제9조의5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기업이다. 등록신청서 제출기업은 과제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시험·분석·평가 ▲보완기술 확보 ▲기술패키징 ▲시작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개발 ▲목업 제작 ▲마케팅 기획 등으로 기술적 타당성 검증과 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한다. 선정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제참여 선정평가 절차]

기타 후속 성장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외에도 해외진출 기술금융 등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각종 육성 사업을 기업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연구소기업 설립 가이드북

부록

- [Q&A 톡] 연구소기업 만들기
- 연구소기업 관련 법규
  - 연구소기업 설립·운영·등록 관련 법규
  - 연구소기업 세제혜택 관련 법규
  - 특구별 지방세 혜택 법규
  -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약정서 작성 가이드
- 표준투자회수 절차 가이드라인
- 기술출자 VS 기술라이센스 비교

Q&A로 알아보는

연구소기업 설립



연구소기업 전문가 & 궁금이

궁금이

현재 기관 여건 상 단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려고 할 때 특별한 제약 조건이 있나요? 1

1 없습니다. 연구소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기관이 연구개발특구법에 규정된 설립 주체(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중 하나라면 단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관이 보유한 연구소기업 주식(지분 포함)비율이 기업의 자본금 규모가 해당하는 구간의 요건 비율 10% 이상이면 됩니다.

궁금이

기술지주회사가 현금을 출자하고, 공공연구기관은 기술 출자가 아니라 기술의 실시권을 허여(라이센스)하는 방식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2

2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구소기업의 설립 목적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출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통한 등록 신청 시 해당기술의 사업화 계획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13조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할 수 있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는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뿐만 아니라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출자가 연구소기업 설립요건은 아닙니다. 또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가 현금 출자를 통해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규모가 해당하는 구간의 요건비율이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소기업에 대한 자료는 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의 특구발간물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송

연구소기업 전문가 & 궁금이

궁금이

그렇다면 기술지주회사가 현금을 출자하고, 공공연구기관은 기술 출자가 아니라 기술의 실시권을 허여(라이센스)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설립유형 중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3

현재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합작투자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신규창업형)을 구분하는 것은 연구소기업에 출자하는 자산이나 권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출자자의 유형과 공동 출자자의 참여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 외에 다른 공동 출자자가 누구인가와 공동 출자자가 어떠한 형태로 연구소기업 설립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합작투자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신규창업형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지주회사 외에 기존기업이 공동 출자자로 참여하고, 공동 출자자와 함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라면, 합작투자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궁금이

연구소기업의 설립 요건 중 하나는 특구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공장이나 부설 연구소, 지점의 소재지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4

아닙니다, "특구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연구소기업 설립 등기 시 본점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 지점 등의 소재지는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연구소기업에 대한 자료는 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의 특구발간물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송

연구소기업 전문가 & 궁금이

궁금이

3가지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중 공공연구기관에 가장 적합한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을 무엇인가요?

5

관련 법률 출자 기술의 특성이나 관련 산업 및 시장의 특성, 사업화 과정의 특성, 공동출자자 선정 가능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합한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분야의 전문성 및 연구개발 능력과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경영자원 및 보완자산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합작투자형이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창업형의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기반이 되는 출자기술의 개발을 주도하였거나 개발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가 창업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진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말 기준 설립된 1,108개 연구소기업을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합작투자형 393개(36%), 기존기업전환형 357개(32%), 신규창업형 358개(32%)입니다.

5

궁금이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겸직하려고 할 때 제약이 있나요?

6

관련 법률 및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연구개발특구법은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직기간은 3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직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과 관련하여서는 겸직 기간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공연구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특구법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연구원의 휴직 또는 겸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의 내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연구소기업에 대한 소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연구소기업"을 검색하세요.

전송

궁금이

연구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7

연구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됩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지방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연구소기업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

궁금이

연구소기업의 증자(增資)로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기업 주식 비율이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이 될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고,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8

아닙니다.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2014년 11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지주회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규모가 해당하는 구간의 주식보유 비율 요건(기술개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10%, 기술개발 투자 외의 이유로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 이후 총 자본금이 해당하는 구간의 주식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주식 보유 비율이 5% 이상일 경우에는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8

연구소기업에 대한 자료는 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의 특구발간물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송

궁금이

연구소기업이 받는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은 출자 기술과 관련된 사업영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나요?

9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조특법 시행령에 감면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된다면 출자 기술과 관련된 사업영역 이외의 사업도 감면대상사업으로 적용 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9

※ 감면대상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1조의 2)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포함)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궁금이

연구개발특구 밖에 소재한 공장이나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나요?

10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 특구 내 사업장을 감면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연구소기업에 대한 소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연구소기업"을 검색하세요.

전송

궁금이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11

가장기본적으로 출자 대상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의 권리 관계 확인, 기술실시권 허여 여부 확인, 발명자 인터뷰 등을 통한 기술 사업화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출자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기술 출자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와 기술 출자 시 연구소기업 설립의 기대효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기술을 출자하였을 경우 국가, 지역사회, 공공연구기관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을 출자하였을 경우 향후 연구개발이나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연구소기업이 폐업하거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었을 때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기술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

궁금이

기술 출자를 위한 기술평가 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2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과정 중 설립주체가 희망할 경우 재단에서 무료로 기술평가를 지원합니다. 이 때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제출하면 기술평가 부서는 요건 및 사전 기술검토, 기술 및 기업 현장조사, 평가요인 분석, 가치산출의 순서로 평가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기술출자를 위한 평가보고서가 제공됩니다.
12

연구소기업에 대한 자료는 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의 특구발간물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송

연구소기업 전문가 & 궁금이

궁금이

연구소기업의 법인 설립 등기는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이전에 해야 하나요? 13

그렇습니다. 2010년 3월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규칙 제4조가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절차'에서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로 개정되면서 현재는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이전에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고,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이 연구소기업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연구소기업 설립 승인 통지 이후 설립 등기를 하고, 30일 이내에 설립 등기 사실을 통지하는 순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13

궁금이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등록 여부 결정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14

등록 신청을 위해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와 정관, 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로 기간 연장 가능)에 통지받게 됩니다.
14

궁금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받은 법인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던 중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5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어 연구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잔존감면기간 중에 연구소기업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재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5

연구소기업에 대한 소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연구소기업"을 검색하세요.

전송

연구소기업 설립, 운영, 등록 관련 법규(발췌)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특별법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②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또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5. 기관운영경비

⑤ 공공연구기관이 제4항 제4호 중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⑥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4. 17.〉

특별법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의3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1. 26]

연구소기업 설립, 운영, 등록 관련 법규(발췌)

시행령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8. 16., 2018. 5. 8., 2019. 7. 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 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 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2. 7. 26.]

시행령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2. 현금
3. 부동산
4. 연구시설 및 기자재
5.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

③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관
2. 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4.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를 포함한다)

④ 법 제9조의3 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 6. 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7. 26.]

1. 정관
2. 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4.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를 포함한다)

시행령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① 법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수익금등의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1.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
2.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미만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0. 16.]

시행령 제14조의2(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법 제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제13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4., 2018. 5. 8.〉

② 법 제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제1항에 따른 비율 미만이 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4.〉

③ 법 제9조의4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전문개정 2012. 7. 26.]

시행규칙 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 제2항 및 영 제13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2. 7. 27.]

연구소기업 설립, 운영, 등록 관련 법규(발췌)

조특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2. 1. 26.,2013. 1. 1., 2015. 12. 15., 2018. 12. 24.〉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0. 12. 27., 2016. 12. 20., 2018. 12. 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 [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삭제 〈2018. 12. 24〉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6. 12. 20., 2018. 12. 24.〉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2. 27., 2018. 12. 24.〉

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⑧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 1.]

조특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18. 10. 16., 2018. 12. 24., 2019. 12. 31., 2020. 5. 19., 2020. 12. 29.〉

1. 삭제 〈2019. 12. 31.〉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4항 및 제63조의2 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 제1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 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 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제6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연구소기업 설립, 운영, 등록 관련 법규(발췌)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 12. 31〉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 제1항, 제126조의3 제2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에 따른 세액 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의 20부터 제121조의 22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 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8., 2010. 2. 18., 2012. 2. 2., 2013. 3. 23., 2016. 6. 21., 2020. 11. 20.〉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 산종자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 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③ 법 제12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 2. 7., 2019. 2. 12.〉

④ 법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0., 2017. 2. 7., 2019. 2. 12〉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X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조의2 제3항 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2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2. 12.〉

1.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2.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7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⑥ 법 제12조의2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19. 2. 12.〉

1. 상시근로자의 수: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상시근로자 수: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9. 2. 12〉

⑧ 법 제12조의2 제7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30., 2019. 2. 12.〉 [본조신설 2007. 2. 28.]

[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14. 2. 21.〉]

특구별 지방세 혜택 법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1.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5546호]

제8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12. 29.,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6. 19.]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463호]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6.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5. 29.]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523호]

제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 한다. 〈개정 2018. 10. 19.〉

③ 본 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12. 31.] [전라남도조례 제5217호]

제14조(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8. 3. 29.〉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1. 1. 1.] [전라북도조례 제4854호]

제1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6. 1.] [광주광역시조례 제5444호]

제9조(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12. 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동구 구세 감면 조례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북구(제7조) [시행2020. 5. 29]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600호] *광산구(제5조) [시행2020. 7. 17]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535호]
* 동구(제8조) [시행2020. 5. 28]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382호]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1. 1. 1.] [대구광역시조례 제5505호]

제13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5. 10., 2017. 12. 27., 2020. 12. 10.〉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 5. 10.〉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구, 달성군,북구 구·군세 감면 조례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달서구(제8조) [시행2020. 12. 3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473호] *동구(제9조) [시행2020. 12. 2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420호]
*달성군(제12조) [시행2021. 1. 1]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727호] *북구(제9조) [시행2020. 12. 3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437호]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1.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6284호]

제13조(부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 12. 27., 2020. 12.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남구,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부산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남구(제10조) [시행2019. 4. 18]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259호] *강서구(제7조) [시행 2020. 1. 1]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176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5. 29.] [전라남도장선군조례 제2414호]

제4조(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12. 11.]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216호]

제8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9. 06. 11.〉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12. 2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734호]

제7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19. 7. 1.]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690호]

제9조(전라북도 완주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1. 2. 17.]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777호]

제12조(전라북도 정읍시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09. 25.〉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1. 2. 10.] [충청북도조례 제4501호]

제1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1. 2. 1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0.11. 5.] [경상남도조례 제4868호]

제7조의4(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내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11. 5.〉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12. 17.] [경상북도조례 제4422호]

제13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내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9. 12. 30.〉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5. 15.]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508호]

제10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5. 1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10. 7.]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415호]

제7조의4(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5. 26.]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764호]

제9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5. 15.]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333호]

제9조의2(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 신설 2020. 5. 15.〉

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5. 18.]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577호]

제10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5. 18.〉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6. 12.]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999호]

제11조(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0. 6. 12.〉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1. 1. 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703호]

제6조의2(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 1. 1.〉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1. 6. 2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187호, 2021. 6. 21., 일부개정]

제8조의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6.21.〉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1. 5. 2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102호, 2021. 5. 25., 일부개정]

제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1.6.21.〉

울주 강소특구

제7조의2(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를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4.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외국연구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 ·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6.21.〉 *울주군 감면 조례는 차년도 2월 쯤 개정 예정

군산 강소특구

제9조의2(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감면) 〈신설 2021.05.17.〉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특구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1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구미 강소특구

제9조의2(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 · 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1.6.21.〉

※ 자세한 사항과 특례의 제한 등은 각 감면조례 및 담당 지자체에 확인 바랍니다.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위원회)

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라 한다)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소기업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신청철회)

설립기관이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철회)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별지 제4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소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 제1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요건
2. 기타 연구소기업 요건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③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장관은 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확인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진흥재단을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설립기관은 제5조제1항 단서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황조사 등)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운영·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5월 31일까지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6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3 제4항 및 영 제14조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과 잉여금 현황 및 사용 내역
2. 기타 연구소기업의 현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의2(사후관리 등)

① 장관은 연구소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진흥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후관리결과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 및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기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 및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연구소기업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연구소기업 등록 및 취소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윤리규정)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소속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05호, 2015. 12. 28.〉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소기업설립을 위한 표준설립약정서 작성 가이드라인

* 본 설립약정서 양식은 가장 기본적인 단독설립기관/현물(기술)출자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가이드라인이며, 설립 약정서 작성 시 이해를 돕고자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한국○○○연구원(이하 "(예)연구소"라 한다)과 (예)주식회사 ○○○(이하 "(예)공동출자기업"이라 한다)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일체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등록)

① "연구소"와 "공동출자기업"은 공동출자법인 설립절차를 완료하고, 설립 후 특구법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등록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출자기업"이 연구소기업으로 성립하는 시기는 특구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연구소기업 등록을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③ 연구소기업의 본점은 특구법에 따라 OO연구개발특구 내에 두기로 하며, 연구소기업은 필요에 따라 한국 또는 기타 지역에 지점, 지사, 기타 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사업목적)

연구소기업의 사업목적은 "연구소"가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3조(기술출자)

① 연구소기업 설립에 따라 "연구소"는 [별첨]에서 정하는 기술을 연구소기업에 OO권(예: 실시권) 형태로 출자하며, 국가공인평가기관에서 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별첨] 구성 시 포함 참고 내용

연구소 제공기술: 특허기술 0건은 연구소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동일 특허의 개량기술 실시와 관련해서는 연구소기업에 우선 협상 권한을 부여한다.

발명의 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국가	
출원/등록인	

[작성가이드] 양자 간 협의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② 연구소는 연구소기업에 제공하는 기술이 연구소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3자로부터의 지적재산권 관련 이의제기와 같은 일체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없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연구소기업이 위와 같은 제3자의 이의제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 이외의 기술을 "공동출자기업"과 "연구소"가 연구소기업에 제공할 경우 기술에 대한 대가는 관련되는 법률과 규정 및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4조(자본금 및 주식)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지분율, 1주의 금액, 주권의 종류 및 발행한 주식의 수 등은 주주 간 또는 투자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다.

[대안] 자본금 및 주식 내용을 설립약정서에 포함 시

① 연구소기업의 설립 시 자본금은 금 000원(₩000,000,000)으로 한다.

② 연구소기업의 설립 시에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발행하는 주식 1주의 액면가는 금 00원(₩00)으로 한다.

③ 연구소기업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수는 00주로 한다.

④ 연구소기업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상법,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와 "공동출자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연구소기업의 설립자본금 및 출자비율)

① 연구소기업 설립 시 "연구소"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100분의 10(10%)의 지분을, "공동출자기업"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100분의 90(9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설립 시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000원(₩00,000,000)을 출자하기로 하며, "공동출자기업"는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연구소기업 설립 시 자본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 000원(₩00,000,000)을 출자하기로 하며, 본 약정 체결 후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작성가이드] 출자비율은 「특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비율을 참고

제6조(이사 및 감사)

① 연구소기업 이사회의 이사는 O명 이상으로 하고, "연구소"가 지명하는 이사 O명과 "공동출자기업"이 지명하는 이사 O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 연구소가 지명한 이사는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근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필요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연구소기업은 "연구소"와 "공동출자기업" 모두 동의하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주식의 양도)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각자가 보유한 연구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그 밖의 담보권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공동출자기업"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기업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거나 제3자로부터 양도제의를 받은 경우 본 약정의 상대방 당사자 혹은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③ 우선매수권 부여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양수도조건(매수예정자, 양도수량, 가액, 그 밖의 거래조건을 포함)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추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신주 인수권)

① "연구소기업"이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연구소"와 "공동출자기업"은 각기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다. 다만,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주식발행시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일방 당사자는 제1항의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양 당사자가 제1항의 신주인수권 또는 제2항의 양도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 발행 시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권된 것으로 간주하며, 인수가 불가능한 신주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본 약정의 조건을 승인한 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제9조(연구소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연구소 지급보증)

연구소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운영자금 등을 외부로부터 차입할 경우 "연구소"는 연구소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그 밖에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연구소기업의 중요 사항 통보 및 실태조사)

① "공동출자기업"은 "연구소"에게 경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의 결과 등에 대하여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1항의 통보와 관련하여 허위, 누락, 과대 혹은 과소보고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소"는 "공동출자기업"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공동출자기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사업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동출자기업"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공동출자기업"의 사업 실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하여 "연구소"과 "공동출자기업"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사업 협력)

"공동출자기업"이 사업화 대상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있어 "연구소"과 "공동출자기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조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부속 합의사항)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부속 합의서에 기재한 사항들에 대하여 "공동출자기업"과 "연구소"는 연구소기업 정관에 반영 또는 회사 운영 시에 반영키로 한다.

제13조(정보의 비밀유지)

"공동출자기업"과 "연구소"는 상대방 또는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상대방 또는 연구소기업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데 동의하며, 본 약정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양도의 금지)

본 약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정에 의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될 수 없다.

제15조(해지)

① "연구소" 또는 "공동출자기업"은 상대방이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0주(예: 2주~4주 권고)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약정이 해지될 경우 해지에 따른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 있으며, 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적용법)

본 약정은 한국법률에 준거하여 해석되는 것으로 하며, 기타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출자기업"과 "연구소"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00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17조(유효기간)

본 약정은 공동출자기업과 연구소가 상호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연구소기업이 특구법상의 법적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구소기업이 등록취소 되는 경우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위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0년 ○월 ○일

설립기관 대표 연구소기업 대표

표준투자회수 절차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투자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관리위원회)

①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출자한 연구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추가 자금 조달, 보유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심의하기 위하여 출자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자관리위원회는 연구소기업의 상장, 인수합병, 주식 공개매수 등을 통해 보유한 주식의 매각이 가능하게 되면 그 즉시 주식 매각의 타당성, 매매 가격, 매매 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주식의 처분 및 수익금의 사용)

① 설립기관의 장은 보유한 연구소기업 주식의 매각이 가능하게 되면 출자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유 주식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은 보유 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금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제4항 및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비상장 주식의 매매)

① 연구소기업 지분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출자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매각하거나 증권회사 등 외부전문회사에 외뢰하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②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의 매각 시 매각 가액에 대한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비상장주식 매각 시 지분매각 금액의 기준 금액을 결정하여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매각이 어려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④ 매각 가액에 대한 계약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하나로 매각 가액을 결정한다.

1. 동일 또는 유사시기에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등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2. 외부전문기관이 평가한 지분 공정가격

⑤ 비상장주식의 매각 시기, 매각 방법, 매각 후 회사의 내부 사정이나 경영상태의 변화 등에 비추어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매각 가액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항의 각 호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연구소기업의 해산)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연구소기업이 해산하는 경우에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잔여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술출자방식(연구소기업)과 기술라이센스방식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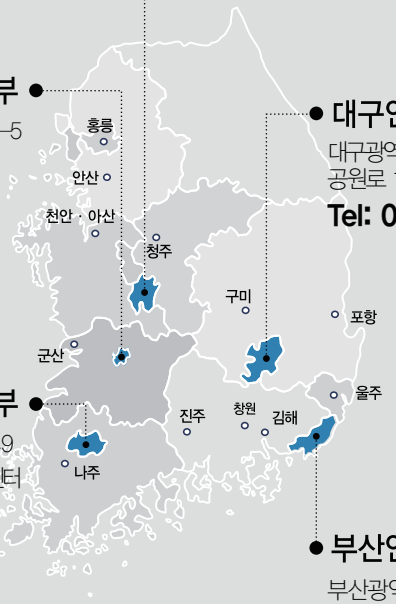
구 분		기술출자 방식 (연구소기업)	기술라이센스 계약 방식 (기술 실시권 허여)
개 념		기술(실시권 포함)을 직접 기업에 출자하고 지분으로 대가를 받는 방식 • 연구소기업 : 출자지분 10% 이상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기업에게 기술의 실시권을 부여하고, 대가로 현금을 취득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성
기술이전 대가		배당금 및 지분 매각 대금 • 기술의 미래가치에 투자 개념	정액 및 경상기술료 • 정액기술료 : 정액으로 현금화하여 징수 • 경상기술료 : 매출액의 3%~5% 수준 • 선금+경상 : 일부를 현금, 일부는 경상 기술료로 징수
특징	절차	기술의 가치평가, 사업성분석 등 보다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	기술도입 기업 발굴 및 협상 과정이 중요 • 기술이전 대가가 협상에 의해 결정됨
	사업화	출자기관(공공연구기관)이 후속개발에 지속적으로 직접참여, 사업화기간의 단축과 높은 완성도 기대 가능	기술이전 이후의 사업화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큼
	연구자	참여연구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화 성공시 획기적 인센티브 가능 • 성공시 지분 매각에 따른 고수익 가능	연구원 인센티브는 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배분에 따름
	기타	기업의 신사업부서의 Spin-Off 등 신규 창업효과와 고용효과 기대	기업의 제품성능개선, 지재권보호 등 다양한 전략에 활용가능
위험도	기업	지분제공 결정까지 사업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야하는 등 사전투자 비용은 높음	이전기술의 가격에 따라 기업의부담이 차이가 있음 • 이전가격 < 사업화 효익 ⇒ 사업화 포기
		기술을 지분으로 확보하여 사업화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은 낮음	비교적 낮은 가격에 이전받은 기술이라면 반드시 사업화에 성공해야 하는 부담은 낮음
		연구소기업 설립시 출자기술의 사업화 성공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음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형태 이므로 사업화 실패시 현금화 불가	정액기술료로 계약체결시 이전즉시 현금화가 가능
		하지만, 사업화 실패시 해당기술은 즉시 회수되며, 추가이전 가능	경상기술료 계약시, 매출액을 추적하여 징수해야하는 부담
		폐업후 대표자 잠적 등 연락두절시 회수의 어려움은 존재(출자시 조치필요)	이전기업이 사업화 포기시, 실시기간까지는 회수 불가

특구별
연구소기업 문의
연락처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27-5 (도룡동 4-27)
Tel: 042-865-8985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동 반룡로 110-5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Tel: 063-905-9757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공원로 16,대구테크비즈센터 3층
Tel: 053-592-8355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월출동 987-1) 광주이노비즈센터 1004호
Tel: 062-603-5023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41번길 77, 부산글로벌테크센터(B-TBC) 1층
Tel: 051-293-48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www.innopolis.or.kr

Search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에 관한 영상 및 자료를
이노폴리스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강소특구 현황

안산/청주/홍릉/천안·아산 강소특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55, 산학연협력관 305호 (안산강소특구지원센터)
031-400-4874

진주/포항/창원/김해 강소특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042-865-7092

나주/구미/군산/울주 강소특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042-865-7062

연구소기업 홍보, 설명자료
www.innopolis.or.kr > 홍보마당 > **특구발간물**

연구소기업 소개영상 YouTube

참고문헌 및 인용문서

이성상(2014), 연구자의 창업의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소기업 설립 · 운영의 효과, 벤처창업연구

Clarysse, B., Wright, M., Lockett, A., van de Velde, E. and Vohora, A.(2005), Spinning out new ventures: a typology of incubation strategies from European research institu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 (2), 183-216

Klofsten, M. and Jones-Evans, D.(2000), Comparing Academic Entrepreneurship in Europe-The Case of Sweden and Ireland, Small Business Economics, 14(4), 299-309.

Bray, M. and Lee, J(2000), "University revenues from technology transfer: Licensing fees vs. equity posi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pp. 385-392

하태정·강희종·손창수·김민재(2012), 2012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지에 실린 자료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발행일 2020년 12월 28일

발행인 강병삼 이사장

발행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